

청년층의 계층이동과 시장경제에 대한 태도

오호영¹⁾ · 이정수²⁾

요약

본 논문에서는 한국교육고용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의 소득계층이 자녀의 대학진학, 대학의 학벌, 소득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가구의 소득계층, 계층이동 등과 청년층의 시장경제에 대한 태도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가구의 소득계층이 자녀의 학력, 학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계층이동이 청년층의 가치관과 높은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계층일수록 자녀가 고학력, 고학벌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은 이를 매개로 한 계층세습의 개연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울러 계층상향이동을 경험한 청년층일수록 공동체에 대한 책임, 시장경제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는 계층이동이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정의감에 부합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건강성을 유지, 강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I. 서론

한국인의 높은 교육열은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으며, 압축적인 경제성장 과정에서 교육투자 확대는 고도성장의 원인이자 결과가 되었다. 6,70년대 급속한 경제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교육기회가 확장되었고 교육은 계층상승을 이루는 가장 유력한 통로 역할을 해왔다. 자녀에 대한 적극적 교육투자를 통해 자녀의 사회적 성취와 계층상승을 이루어낸 자랑스런 부모세대가 다수 등장했고, 이러한 성공경험은 높은 교육열을 더욱 강화하는 확고한 믿음을 형성했다. 교육이 단지 계층상승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은 아니지만, 한국사회에서 유달리 높은 교육열의 이면에는 자녀가 부모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길 희망하는 계층상승 욕구와 지난 산업화 시기에 현실화된 교육을 통한 성공경험이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교육이 계층상승을 위한 사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층세습을 정당화시키는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민주당 유기홍 의원실(2013)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1~2013학년도) 서울 소재 고교별 서울대 합격자 분석 결과

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2) 고려대학교 박사과정

를 보면, 서울소재 일반고 서울대 정시 합격자의 70.1%가 소위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 학생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비율은 2011학년도 54.3%, 2012학년도 57.7%, 2013학년도 70.1%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아울러 수시 합격자도 40.3%가 강남 3구 출신이며, 이 역시 2011학년도 25.3%, 2012학년도 36.2%, 2013학년도 40.0%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정시 합격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2013학년도 기준으로 강남구 48.1%, 서초구 14.4%, 송파구 7.5%, 양천구 7.0%, 노원구 4.8% 순이며, 반대로 정시 합격자 비율이 단 한명도 없는 지역은 강북구, 구로구, 금천구, 성동구, 은평구, 중구 등 6개구이다. 수시 합격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2013학년도 기준 강남구 18.5%, 서초구 11.4%, 노원구 10.7%, 송파구 10.2%, 양천구 7.1% 순이며, 반대로 수시 합격자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성동구 0.5%, 중구 0.5%, 강북구 0.5% 3개구이다.

강남 3구는 대한민국 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지역으로 최고의 학원가가 밀집하여 수준 높은 사교육을 받을 수 있고, 최고의 학군으로 양질의 공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특구이다. 강남의 높은 부동산가격은 돈 없는 서민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강남고교 출신의 높은 명문대 입학률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대물림되고 있다는 주장의 강력한 근거가 된다. 높은 대학진학률은 고등교육의 대중화 시대를 열었으나 교육열은 여전히 식지 않고 있으며 명문대 입시경쟁으로 분출되고 있다. 서울대를 정점으로 하는 강고한 대학서열이 입시와 취업에서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명문대 졸업장이 계층상승을 위한 유력한 통로라는 믿음이 명문대 입시경쟁을 조장하는 배경이 된다. 명문대 진학이 상위계층으로 편입되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자녀의 명문대 진학이 부모의 소득계층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상황이라면 교육은 더 이상 기회균등이 아니며 불공정한 경쟁의 장으로 전락하게 된다.

교육이 기회균등의 장이어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본인 자신의 노력과 타고난 재능을 바탕으로 공정한 경쟁을 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장차 직업지위 획득의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우수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이 단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불운으로 인해 장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꿈꾸기 어렵다면, 그러한 사회는 역동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우수한 사람이 높은 직업지위를 차지하고 막중한 책임이 뒤따르는 권한을 행사하는 사회와 부모 잘 만나 본인의 능력과 무관하게 높은 직업지위를 차지하는 사회가 경쟁한다면 어느 사회가 승리할 것인지는 자명하다.

교육이 기회균등의 장이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대다수 사회구성원이 선망하는 높은 직업지위를 차지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자발적 승복, 인정이 있어야 공동체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환자가 의사의 진료를 믿지 못하고, 원고와 피고가 판사의 판결을 불신하며, 시청자들이 뉴스진행자의 소식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회는 막대한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마찰이 불가피하다. 건강한 민주사회에서는 본인의 노력과 재능이 지위경쟁의 유일한 근거이며, 신분을 근거로 한 어떠한 특권도 배격하기 때문에 누구나 꿈을 꿀 수 있고 경쟁의 결과에 승복할 수 있게 된다. 교육의 기회균등은 높은 사회적 지위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패배자에게 내면으로부터 인정을 획득하는 수단이다.

계층이동은 교육학, 사회학, 경제학 등에서 많이 다루어진 연구주제이다. 국내 선행연구를 주제별로 나누어 보면 교육기회에 대한 출신계층의 영향력 분석(장상수, 2007; 김경근, 2005; 방하남·김기현, 2003; 장상수, 2000; 김영화·김병관, 1999; 이해영 외, 2006), 직업지위 획득, 사회계층 이동에서의 출신계층 및 교육의 영향력(방하남·김기현, 2001; 김영화·김병관, 1999; 이해영 외, 1998) 등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2000년대 들어서 한국노동패널, 한국교육고용패널, 한국교육패널 등 장기추적조사를 통한 양질의 자료생산이 이루어지면서 계층이동 연구는 보다 정교한 통계분석 방법론을 적용하는 등 질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다만, 선행연구들에서는 자료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부모의 소득계층에 따른 명문대 진학, 계층이동 등의 문제는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더불어 소득계층의 이동이 사회에 대한 책임감, 시장경제에 대한 태도 등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교육고용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의 소득계층이 자녀의 대학진학, 대학의 학벌, 소득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가구의 소득계층, 계층이동 등과 청년층의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인식간의 관련성을 분석한다. 고등교육 대중화 시대를 맞이하여 대졸학위 자체의 효용성은 크게 낮아졌지만, 어느 대학출신인가를 의미하는 학벌(學閥)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이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대학학벌은 계층이동의 중요한 매개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자료를 통해 실증적으로 확인되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사실 학벌을 매개로 한 계층이동 문제는 한국과 같이 대학서열이 경직적이고, 명문대 입시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주제이나 자료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충분히 분석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자료상의 제약으로 인해 교육과 계층이동이 주로 교육수준과 결부되어 분석하였지만 본 논문에서는 학벌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이와 더불어 청년층의 소득계층 혹은 부모세대와 비교한 자녀세대의 계층이동이 청년층의 공동체에 대한 태도나 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건강한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동체로부터 개인이 받는 수혜에 상응하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이 발휘될 필요가 있으며, 경쟁과 개인의 책임 등 시장경제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개인의 분발을 통해 계층이동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거참여, 전쟁발발시 참전여부 등의 설문을 통해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분석하고, 소득격차 확대에 대한 태도, 공공기업 민영화, 정부와 개인의 책임, 노력을 통한 삶의 개선, 경쟁에 대한 태도, 경제성장을 통한 개인의 소득증대 등의 항목을 통해 계층이동이 시장경제에 대한 태도와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II. 선행연구 검토

교육에 대한 관점의 차이는 학교를 졸업한 이후 나타나는 노동시장 내의 소득불평등에 대해 전혀 상반된 평가를 내리게 만든다. 교육에 대한 관점은 크게 기능론, 갈등론, 경쟁론으로 구

분되는데 기능론 관점에서는 소득불평등에 대해 수용적 태도를 취한다.

기능론적 관점에 있는 대표적 이론으로서 인적자본이론은 교육을 통해 생산성이 높아지고, 높아진 생산성은 임금상승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소득불평등은 정당한 것이 되며 교육은 불평등을 확대시키는 요인이 된다. 지위획득론 역시 기능론적 입장에서 있는데, 사회적 지위는 각 개인의 사회적 공헌도에 따라 배분되고 자신의 재능과 노력에 취득되므로 사회적 불평등은 용인하여야 된다는 관점이다.

갈등론적 입장에 있는 Bowles & Gintis(1975)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교육은 본질적으로 자본주의적 질서의 재생산에 있다고 본다. 즉, 교육을 더 받은 사람에게 더 높은 임금을 주는 이유는 높은 생산성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적 질서의 수용태도를 배양하거나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을 선발하는데 있으며,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다. 갈등론적 입장에서는 교육은 본질적으로 사회 지배계급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현 상태를 영속화시키기 위한 이데올로기로서 이용된다고 주장한다.

경쟁론은 선별이론(screening theory)이 대표적인데, 교육은 능력을 높이는 수단이 아니라 단지 개인이 갖고 있는 능력에 대해 신호제공(signalling)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본다. 교육을 통해 능력이 키워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능력자와 무능력자를 가려내는 선별도구라는 입장이다. 교육이 선별도구로 기능하려면 교육기회의 균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명문대 입학이 부모의 사교육에 의해 좌우된다면 교육의 선별기능은 작동하지 못한다.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교육기회의 평등은 정당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상응하는 보상이 돌아가는 전제조건이 되고 사회발전을 지탱하는 핵심적 이데올로기가 된다. 교육기회의 확대, 경제성장, 복지제도의 확충은 현대사회에서 교육기회의 평등에 대한 기대를 높였지만, 교육기회의 평등이 실현되고 있다는 믿음은 점차 무너지고 있다.

실제로 한국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해보면 부모의 학력수준, 직업지위가 높을수록 자녀의 교육기회는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직업지위 점수로 측정된 출신배경의 영향력을 분석한 장상수(1997)에 따르면 교육성취에 대한 계층간 격차는 결코 줄어들지 않았으며 대학진학과 졸업모두에서 출신계층의 영향력이 지속되었다. 이해영 외(2006)는 고등학교 진학에서는 계층간 격차가 축소되었으나, 대학진학에서는 계층간 격차가 지속된다는 결과를 얻었다. 방하남·김기현(2003)은 부모의 교육수준과 가족의 사회적 자본이 고교 진학 확률, 전문계 대비 일반계 진학확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전문대 대비 4년제 대학 진학확률을 높여 교육의 계층화가 지속됨을 보였다. 부의 교육수준이 자녀의 교육수준을 매개로 직업지위를 획득하는 경로의 중요성이 여러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었다.(방하남·김기현, 2001; 김영화·김병관, 1999; 장상수, 1997) 선행연구에서는 전체적으로 가구 출신배경이 교육격차, 교육연수, 교육기회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비교적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학서열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분석은 자료상의 제한으로 연구가 미진하였는데, 대학서열의 정점에 있는 명문대학에 임금프리미엄이 집중되며(한준·한신갑, 2006; 장수명, 2006), 수능점수와 임금수준이 강한 관련성을 확인한 연구들(김희삼, 2009; 김홍균·문혜경, 2007; 오호

영, 2006)이 있다. 고등교육의 확대 속에서 부모의 소득계층과 대학 학벌, 대학 학벌과 자녀의 소득계층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과 비교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선행연구들이 주로 학력을 중심으로 교육격차, 계층이동을 분석한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학벌에 주목하여 계층이동 분석을 시도한다. 치열하게 전개되는 대학입시경쟁은 서열화된 대학구조 속에서 본질적으로 명문대학 입학경쟁의 성격을 가지며, 이는 계층이동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질 것이다.

둘째, 장기간의 개인단위 추적관찰 자료인 한국교육고용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부모의 소득계층, 자녀의 교육수준 및 학벌, 자녀의 소득계층 등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한국교육고용패널은 동년배(cohort) 장기추적 자료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이한 연령집단으로 구성된 자료에 비해 여러 가지 이질성을 통제하고 심층적 분석이 가능하다.

셋째, 소득계층 이동과 청년층이 갖고 있는 사회에 관한 책임감, 시장경제에 대한 태도의 관련성을 분석한다. 시장경제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계층상승에 대한 강한 열망과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고, 계층이동의 경험은 시장경제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한국교육고용패널 10차 조사에서는 사회에 대한 청년층의 태도 및 인식을 설문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Ⅲ. 실증분석

1. 분석자료 구축

한국교육고용패널(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 이하 KEEP) 조사는 청년층의 교육관련 정보를 충분히 생성하면서 교육과 노동시장 간의 관계를 보다 밀도 있게 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며 대표성을 갖는 패널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2004년 1차 조사를 실시한 이래 매년 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교육 및 인적자원개발 현황과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실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4년의 1차 조사와 2013년의 10차 조사를 이용하여 자료를 구축하였으며, 2004년 1차 조사당시 고3 코호트 4,000명(실업계고 2,000명, 인문계고 2,000명) 중 2013년까지 추적이 이루어진 총 2,303명을³⁾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한다. 가구소득계층의 구분은 OECD 기준에 따라 가구의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2004년 1차 조사당시 가구 중위소득 250만원을 이용하여, ‘250만원×2/3미만’인 가구는 저소득층, ‘250만원×2/3이상~250만원×4/3이하’ 중소득층, ‘250만원×4/3초과’를 고소득층으로 각각 구분하였다.

가구소득계층은 저소득층 28.7%, 중소득층 45.5%, 고소득층 25.8% 등으로⁴⁾ 나타나고 있으며

3) 분석목적에 따라 분석대상은 차이가 있으며, 2,303명은 최대 표본수임에 주의해야 한다.

실업계고에 비해 인문계고의 소득계층 구성이 고소득층 위주인 특징을 보였다. 즉, 실업계고는 저소득층 41.5%, 중소득층 43.6%, 고소득층 14.9% 등인 반면, 인문계고는 저소득층 17.0%, 중소득층 47.2%, 고소득층 35.8% 등이다. 성별 가구소득 계층 차이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1〉 요약통계

(단위 : 명, %)

		가구소득						계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실업계고	남자	255	(41.5)	265	(43.1)	95	(15.4)	615	(100.0)
	여자	203	(41.6)	216	(44.3)	69	(14.1)	488	(100.0)
	계	458	(41.5)	481	(43.6)	164	(14.9)	1,103	(100.0)
인문계고	남자	116	(16.8)	325	(47.0)	250	(36.2)	691	(100.0)
	여자	88	(17.3)	241	(47.3)	180	(35.4)	509	(100.0)
	계	204	(17.0)	566	(47.2)	430	(35.8)	1,200	(100.0)
계	남자	371	(28.4)	590	(45.2)	345	(26.4)	1,306	(100.0)
	여자	291	(29.2)	457	(45.8)	249	(25.0)	997	(100.0)
	계	662	(28.7)	1,047	(45.5)	594	(25.8)	2,303	(100.0)

주: ()내는 백분률

2. 가구소득과 학력, 학벌

가. 기술적 분석

가구소득에 따라 자녀의 최종학력은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기준으로 자녀의 최종학력을 집계한 결과, 가구소득 계층별로 4년제대학 졸업 비율은 저소득층(27.2%), 중소득층(51.8%), 고소득층(69.7%)로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4년제대졸 비율이 상승하였다. 반대로, 고졸학력 비율은 저소득층(29.9%), 중소득층(11.8%), 고소득층(4.0%) 등으로 소득계층이 높아질수록 하락하는 특징을 보였다.

〈표 2〉 가구소득계층과 자녀의 최종학력

(단위 : 명, %)

		고등학교	전문대	4년제대	계				
실업계고	저소득층	178	(38.9)	214	(46.7)	66	(14.4)	458	(100.0)
	중소득층	110	(22.9)	256	(53.2)	115	(23.9)	481	(100.0)
	고소득층	17	(10.4)	86	(52.4)	61	(37.2)	164	(100.0)
	계	305	(27.7)	556	(50.4)	242	(21.9)	1,103	(100.0)

<표 계속>

4) 1차년도 조사당시의 가구소득분포와 본고의 가구소득분포를 비교한 결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전문대		4년제대		계	
인문계고	저소득층	20	(9.8)	70	(34.3)	114	(55.9)	204	(100.0)
	중소득층	14	(2.5)	125	(22.1)	427	(75.4)	566	(100.0)
	고소득층	7	(1.6)	70	(16.3)	353	(82.1)	430	(100.0)
	계	41	(3.4)	265	(22.1)	894	(74.5)	1,200	(100.0)
계	저소득층	198	(29.9)	284	(42.9)	180	(27.2)	662	(100.0)
	중소득층	124	(11.8)	381	(36.4)	542	(51.8)	1,047	(100.0)
	고소득층	24	(4.0)	156	(26.3)	414	(69.7)	594	(100.0)
	계	346	(15.0)	821	(35.6)	1,136	(49.3)	2,303	(100.0)

주: ()내는 백분률

이러한 경향은 실업계고 코호트와 인문계고 코호트로 구분하여 살펴보더라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가구소득 계층별로 4년제대학 졸업 비율을 살펴보면, 실업계고 코호트에서 저소득층(14.4%), 중소득층(23.9%), 고소득층(37.2%)로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4년제대학 졸업 비율이 상승하였다. 반대로, 고졸학력 비율은 저소득층(38.9%), 중소득층(22.9%), 고소득층(10.4%) 등으로 소득계층이 높아질수록 하락하는 특징을 보였다. 가구소득 계층별로 4년제대학 졸업 비율은 인문계고 코호트에서 저소득층(55.9%), 중소득층(75.4%), 고소득층(82.1%)로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4년제대학 졸업 비율이 상승하였다. 반대로, 고졸학력 비율은 저소득층(9.8%), 중소득층(2.5%), 고소득층(1.6%) 등으로 소득계층이 높아질수록 고졸 비율은 하락하는 특징을 보였다. 또한, 실업계고에서는 동일한 소득계층이라고 하더라도 인문계고에 비해 전체적으로 학력이 낮은 특징을 보였다.

가구소득계층에 따른 자녀의 대학서열을 살펴보기 위하여 2010년 기준 중앙일보 대학평가 순위를 사용하였다. 대학졸업 시점이 성별로 차이가 있으나 4년제 대학을 기준으로 남자의 경우 2010년에 대체로 졸업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여 2010년의 대학서열을 활용하였다. 본고에서는 분석을 위한 표본수가 충분치 않아 대학서열을 10위씩 묶어서 사용하였고, 대학서열이 년도별로 큰 변동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특정년도의 대학평가를 사용하더라도 분석결과는 대체로 유지될 것으로 생각된다. 앞서의 분석에서 가구의 소득계층에 따라 자녀의 최종학력에 커다란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대학서열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확인되었다.

가구소득계층별로 대학서열에 따른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저소득층가구의 1~10위권 대학 진학비율은 0.9%, 11~20위 1.9% 등이나, 고소득층은 7.4%, 11~20위 10.2% 등으로 저소득층가구에 비해 각각 8.6배, 5.3배 높게 나타났다. 21위 이하 4년제대학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소수의 명문대학 진학비율은 가구소득계층에 따라 큰 차이가 존재하였다. 이는 교육이 계층세습의 통로가 되는 방식이 자녀의 학력차이보다는 학벌차이에 더 크게 기인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인문계고 코호트와 실업계고 코호트의 가구소득계층 구성이 상이한 점을 감안하기 위하여 인문계고 코호트만을 대상으로 가구소득 계층에 따른 대학서열별 구성비를 계산한 결과 역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표 3〉 가구소득계층과 대학서열(전체)

(단위 : 명, %)

	가구소득계층			계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1~10위대학	4 (0.9)	25 (2.7)	42 (7.4)	71	(3.6)
11~20위대학	9 (1.9)	45 (4.9)	58 (10.2)	112	(5.7)
21~30위	21 (4.5)	44 (4.8)	30 (5.3)	95	(4.9)
31~40위	13 (2.8)	32 (3.5)	36 (6.3)	81	(4.1)
41위이하	133 (28.7)	396 (42.9)	248 (43.5)	777	(39.7)
전문대	284 (61.2)	381 (41.3)	156 (27.4)	821	(42.0)
계	464 (100.0)	923 (100.0)	570 (100.0)	1,957	(100.0)

〈표 4〉 가구소득계층과 대학서열(인문계고 코호트)

(단위 : 명, %)

	가구소득계층			계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1~10위대학	4 (2.2)	24 (4.3)	41 (9.7)	69	(6.0)
11~20위대학	6 (3.3)	42 (7.6)	56 (13.2)	104	(9.0)
21~30위	13 (7.1)	42 (7.6)	26 (6.1)	81	(7.0)
31~40위	10 (5.4)	30 (5.4)	36 (8.5)	76	(6.6)
41위이하	81 (44.0)	289 (52.4)	194 (45.9)	564	(48.7)
전문대	70 (38.0)	125 (22.6)	70 (16.5)	265	(22.9)
계	184 (100.0)	552 (100.0)	423 (100.0)	1,159	(100.0)

가구소득계층과 전공선택을 살펴보면 소득계층에 따른 차이가 뚜렷이 관찰된다. 전문대의 저소득층 비중은 33.6%이나, 공학계열 38.0%, 사회계열 36.7%로 높아 전공선택이 집중된 반면, 인문계열 20.7%, 자연계열 23.9%로 저조하였다. 전문대의 고소득층 비중은 19.4%이나, 인문계열 31.0%, 자연계열 23.9%로 전공선택 비중이 높았고 교육계열 6.3%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4년제대의 저소득층 비중은 15.9%이나, 공학계열 17.9%로 높아 전공선택이 집중된 반면, 교육계열 10.5%, 인문계열 14.3%로 저조하였다. 4년제대학의 고소득층 비중은 36.4%이나, 예체능계열 42.4%, 인문계열 38.7%, 교육계열 38.6%로 전공선택 비중이 높았고, 의약계열은 31.8%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저소득층은 전문대와 4년제 모두에서 취업률이 양호한 공학계열을 선호하였고, 고소득층은 취업률이 다소 떨어지는 인문계열, 예체능계열을 선호하는 특징을 보였다.

〈표 5〉 가구소득계층과 전공선택(전문대 및 4년제대학교)

(단위 : 명, %)

		가구소득계층			계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전문대	인문계열	6 (20.7)	14 (48.3)	9 (31.0)	29 (100.0)	
	사회계열	61 (36.7)	74 (44.6)	31 (18.7)	166 (100.0)	
	교육계열	10 (31.3)	20 (62.5)	2 (6.3)	32 (100.0)	
	공학계열	100 (38.0)	118 (44.9)	45 (17.1)	263 (100.0)	
	자연계열	16 (23.9)	35 (52.2)	16 (23.9)	67 (100.0)	
	의약계열	29 (28.2)	53 (51.5)	21 (20.4)	103 (100.0)	
	예체능계열	45 (33.3)	60 (44.4)	30 (22.2)	135 (100.0)	
	계	267 (33.6)	374 (47.0)	154 (19.4)	795 (100.0)	
4년제	인문계열	17 (14.3)	56 (47.1)	46 (38.7)	119 (100.0)	
	사회계열	48 (16.3)	141 (47.8)	106 (35.9)	295 (100.0)	
	교육계열	6 (10.5)	29 (50.9)	22 (38.6)	57 (100.0)	
	공학계열	58 (17.9)	155 (47.8)	111 (34.3)	324 (100.0)	
	자연계열	24 (16.8)	69 (48.3)	50 (35.0)	143 (100.0)	
	의약계열	7 (15.9)	23 (52.3)	14 (31.8)	44 (100.0)	
	예체능계열	19 (13.2)	64 (44.4)	61 (42.4)	144 (100.0)	
	계	179 (15.9)	537 (47.7)	410 (36.4)	1,126 (100.0)	

〈표 6〉 가구소득계층과 전공선택(4년제대학교 대학서열 40위이내)

(단위 : 명, %)

		가구소득계층			계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인문계열	5 (11.9)	15 (35.7)	22 (52.4)	42 (100.0)		
사회계열	10 (11.1)	45 (50.0)	35 (38.9)	90 (100.0)		
교육계열	2 (11.1)	5 (27.8)	11 (61.1)	18 (100.0)		
공학계열	18 (14.9)	50 (41.3)	53 (43.8)	121 (100.0)		
자연계열	9 (15.5)	22 (37.9)	27 (46.6)	58 (100.0)		
의약계열	2 (22.2)	2 (22.2)	5 (55.6)	9 (100.0)		
예체능계열	1 (4.8)	7 (33.3)	13 (61.9)	21 (100.0)		
계	47 (13.1)	146 (40.7)	166 (46.2)	359 (100.0)		

가구소득계층별 대학진학 행태를 좀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4년제대학 대학서열 40위 이내만을 대상으로 전공선택을 비교하였다. 4년제대학 대학서열 40위 이내에서 저소득층의 구성비는 13.1%이며, 전공계열별로는 공학계열 14.9%, 자연계열 15.5%, 의약계열 22.2% 등으로 전공선택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의 구성비는 46.2%인데, 인문계열 52.4%, 교육계열 61.1%, 의약계열 55.6%, 예체능계열 61.9% 등으로 전공선택이 활발하였다. 특히 예체능계열의 가구소득 구성비는 고소득층이 높고 저소득층은 낮은 특징을 보였다.

나. 심층분석

여기서는 가구소득과 자녀의 학력, 혹은 학벌의 관계를 심층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10차 조사에 응답하였고 1차 조사당시 가구소득이 있는 고3 코호트 2,303명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종속변수는 출신고교 유형(high, 실업고=1, 일반고=0), 출신고교소재지(hlocal, 지방=1, 서울=0), 성별(female, 여자=1,남자=0), 고3당시 사교육 여부(tutor, 사교육받음=1,안받음=0), 고3당시 미래직업결정여부(career, 미래직업결정=1, 미결정=0), 고3당시 가구소득계층 더미변수((lowfam, 저소득가구=1,기타=0), (midfam, 중소득가구=1,기타=0), (higfam, 고소득가구=1,기타=0)) 등이다.

종속변수는 학력과 학벌로 나누었는데, 가구의 소득계층에 따른 효과를 여타 변수들을 통제 한 상태에서 살펴보기 위함이다.

〈표 7〉 설명변수 요약통계

변수명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출신고교더미(전문계고=1,일반계고=0)	2,303	0.479	0.500	0	1
출신고교소재지더미(지방=1,서울=0)	2,303	0.857	0.350	0	1
성더미(여자=1,남자=0)	2,303	0.433	0.496	0	1
사교육더미(사교육받음=1,안받음=0)	2,303	0.477	0.500	0	1
진로더미(미래직업결정=1, 미결정=0)	2,303	0.675	0.468	0	1
가구저소득더미(저소득가구=1,기타=0)	2,303	0.287	0.453	0	1
가중소득더미(중소득가구=1,기타=0)	2,303	0.455	0.498	0	1
가구고소득더미(고소득가구=1,기타=0)	2,303	0.258	0.438	0	1

〈표 8〉 종속변수 요약통계

		표본수(명)	백분률	누적백분률	
학력	고졸	346	15.0	15.0	
	전문대졸	821	35.7	50.7	
	4년제대졸	1,136	49.3	100.0	
	계	2,303	100		
학벌	고졸	346	15.0	15.0	
	전문대졸	821	35.7	50.7	
	4년제대학	41위이하	777	33.7	84.4
		31~40위	81	3.5	87.9
		21~30위	95	4.1	92.1
		11~20위	112	4.9	96.9
		1~10위	71	3.1	100.0
	계	2,303	100.0		

분석모형으로는 순서형 로짓모형(ordered logit model)을 이용하였는데, 학력(고졸=1, 전문대졸=2, 4년제대졸=3)은 전형적인 순서형 형태를 갖고 있으며, 또한 학벌역시 대학서열에 따라 범주화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종속변수가 명목형 척도인 경우 통상최소자승법(OLS)에 의한 회귀분석은 최적의 추정값(BLUE: best linear unbiased estimates)을 산출하지 못하는데 비해 로짓분석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에 특정한 누적분포함수를 도입하여 범주형 종속변수 분석에 적합하다. 로지스틱분포(logistic distribution)의 누적분포함수, π_i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pi_i(y = 1|x) = \frac{\exp(\beta' x_i)}{1 + \exp(\beta' x_i)} \quad (\text{식 3})$$

이를 로그를 취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로짓(logit), 즉 log of the odds ratio가 정의된다.

$$\log\left(\frac{\pi_i}{1 - \pi_i}\right) = \beta' x_i \quad (\text{식 4})$$

로짓모형 추정식의 계수가 갖는 직관적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석의 편의를 위하여 승산비(odds ratio)를 계산하여 표로 제시하였다. 학력을 고졸, 전문대졸, 4년제대졸 등의 3개 범주로 만들어 순서형 로짓모형을 추정하였다. 설명변수 조합에 따라 총 3개의 모형을 추정하였으며, 모형은 전체적으로 유의하였고 유사결정계수(Pseudo R2)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모형 3을 기준으로 결과를 해석해보면 고학력이 될 오즈(odds)는 실업고가 일반고에 비해 14.9% 낮았고, 서울에 비해 지방이 51.8% 낮으며, 남자에 비해 여자가 69.1% 낮았고, 사교육을 안받은 경우에 비해 받은 경우가 1.222배 높았고, 미래직업을 결정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1.972배 높았다. 가구소득계층과 관련해서는 저소득가구에 비해 중소득가구일 경우 고학력이 될 오즈는 2.037배 높고, 저소득가구대비 고소득가구는 2.978배 높았다. 사교육 여부를 통제하고도 가구의 소득계층에 따라 자녀가 고학력이 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짐을 보여주는 것으로 선행연구 결과를 재확인해주는 것이다.

<표 9> 학력에 대한 순서형 로짓모형 추정결과

	모형 1	모형 2	모형 3	e ^{^b1} (모형 3)
출신고교더미(실업고=1, 일반고=0)	-2.230*** (0.096)	-2.010*** (0.099)	-1.910*** (0.100)	0.149
출신고교소재지더미(지방=1, 서울=0)	-0.901*** (0.150)	-0.749*** (0.153)	-0.658*** (0.155)	0.518

<표 계속>

	모형 1	모형 2	모형 3	e ^b (모형 3)
성더미(여자=1,남자=0)	-0.358*** (0.088)	-0.382*** (0.089)	-0.370*** (0.090)	0.691
사교육더미(사교육받음=1,안받음=0)	0.294*** (0.092)	0.212** (0.093)	0.200** (0.094)	1.222
진로더미(미래직업결정=1, 미결정=0)	-	0.835*** (0.095)	0.679*** (0.098)	1.972
가구중소득더미(중소득가구=1,기타=0)	-	-	0.711*** (0.103)	2.037
가구고소득더미(고소득가구=1,기타=0)	-	-	1.090*** (0.131)	2.978
Log likelihood	-1911.4	-1872.9	-1832.8	
Pseudo R2	0.1709	0.1876	0.2050	
표본수	2,303	2,303	2,303	

주 : 1) e^b = exp(b) = factor change in odds for unit increase in X
 2) *-10%, **-5%, ***-1% 유의수준에서 각각 유의함을 의미.

학벌을 고졸, 전문대졸, 4년제대졸 41위이하, 31~40위, 21~30위, 11~20위, 1~10위 등의 7개 범주로 만들어 순서형 로짓모형을 추정하였다. 설명변수 조합에 따라 총 3개의 모형을 추정하였으며, 모형은 전체적으로 유의하였고 유사결정계수(Pseudo R2)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모형 3을 기준으로 결과를 해석해보면 고학벌이 될 오즈(odds)는 실업고가 일반고에 비해 14.7% 낮았고, 서울에 비해 지방이 25.0% 낮으며, 남자에 비해 여자가 63.4% 낮았고, 사교육을 안받은 경우에 비해 받은 경우가 1.179배 높았고, 미래직업을 결정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1.885배 높았다. 가구소득계층과 관련해서는 저소득가구에 비해 중소득가구일 경우 고학력이 될 오즈는 1.945배 높고, 조소득가구대비 고소득가구는 2.775배 높았다.

〈표 10〉 학벌에 대한 순서형 로짓모형 추정결과

	모형 1	모형 2	모형 3	e ^b (모형 3)
출신고교더미(실업고=1,일반고=0)	-2.240*** (0.094)	-2.020*** (0.097)	-1.910*** (0.098)	0.147
출신고교소재지더미(지방=1,서울=0)	-1.610*** (0.123)	-1.470*** (0.124)	-1.390*** (0.125)	0.250
성더미(여자=1,남자=0)	-0.442*** (0.080)	-0.467*** (0.080)	-0.455*** (0.081)	0.634
사교육더미(사교육받음=1,안받음=0)	0.249*** (0.085)	0.180** (0.086)	0.165* (0.086)	1.179
진로더미(미래직업결정=1, 미결정=0)		0.786*** (0.088)	0.634*** (0.090)	1.885

<표 계속>

	모형 1	모형 2	모형 3	e ^{b1} (모형 3)
가구중소득더미(중소득가구=1,기타=0)			0.665*** (0.099)	1.945
가구고소득더미(고소득가구=1,기타=0)			1.020*** (0.119)	2.775
Log likelihood	-3013.0	-2972.8	-2933.2	
Pseudo R2	0.1407	0.1522	0.1635	
표본수	2,303	2,303	2,303	

주 : 1) e^b = exp(b) = factor change in odds for unit increase in X
 2) *-10%, **-5%, ***-1% 유의수준에서 각각 유의함을 의미.

3. 가구소득과 취업

가구소득계층별 자녀의 2013년 기준 경제활동상태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고용률(=취업자수/전체인구)은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높고 고소득계층일수록 낮은 특징을 보였다. 성별 고용률은 상이한 특징을 보였는데, 남자의 경우는 저소득층 83.6%, 중소득층 78.0%, 고소득층 71.6%로 소득이 높아질수록 고용률이 저하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여자는 저소득층 73.2%, 중소득층 78.1%, 고소득층 78.7%로 저소득층에 비해 중, 고소득층의 고용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은 1%대로 매우 낮았고 소득계층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저소득층이 약간 높은 특징을 보였다.

〈표 11〉 가구소득과 취업

(단위 : 명, %)

		취업자	실업자	비경활	계	고용률	실업률
남자	저소득층	310	4	57	371	83.6	1.3
	중소득층	460	6	124	590	78.0	1.3
	고소득층	247	3	95	345	71.6	1.2
	계	1,017	13	276	1,306	77.9	1.3
여자	저소득층	213	4	74	291	73.2	1.8
	중소득층	357	7	93	457	78.1	1.9
	고소득층	196	2	51	249	78.7	1.0
	계	766	13	218	997	76.8	1.7
계	저소득층	523	8	131	662	79.0	1.5
	중소득층	817	13	217	1,047	78.0	1.6
	고소득층	443	5	146	594	74.6	1.1
	계	1,783	26	494	2,303	77.4	1.4

남자의 경우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고용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가구의 경제적 궁핍으로 인해 저소득가구의 청년층이 조기취업의 필요성이 더 높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청년층 취업난으로 인해 스펙쌓기 등 치열한 취업경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충분한 취업준비없이 투매양상으로 취업하는 것은 청년층 선망직장 취업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고에서 선망직장은 취업자 중에서 직장유형이 종업원 300인 이상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외국인기업 등의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취업자 1,563명 중 선망직장 취업비율은 전체적으로 24.8%인데,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선망직장 취업비율도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저소득층 가구에 속하는 청년층 취업자 중 선망직장 종사비율은 19.5%, 중소득층 25.4%, 고소득층 30.0% 등으로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상승하였다. 남자의 선망직장 종사비율이 여자에 비해 높으나,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선망직장 종사비율이 증가하는 패턴은 성별로 뚜렷한 차이가 없었다.

〈표 12〉 가구소득과 선망직장 취업

(단위 : 명, %)

		선망직장		비선망직장		계	
남자	저소득층	60	(22.1)	211	(77.9)	271	(100.0)
	중소득층	112	(27.4)	297	(72.6)	409	(100.0)
	고소득층	72	(35.3)	132	(64.7)	204	(100.0)
	계	244	(27.6)	640	(72.4)	884	(100.0)
여자	저소득층	30	(15.7)	161	(84.3)	191	(100.0)
	중소득층	73	(22.9)	246	(77.1)	319	(100.0)
	고소득층	40	(23.7)	129	(76.3)	169	(100.0)
	계	143	(21.1)	536	(78.9)	679	(100.0)
계	저소득층	90	(19.5)	372	(80.5)	462	(100.0)
	중소득층	185	(25.4)	543	(74.6)	728	(100.0)
	고소득층	112	(30.0)	261	(70.0)	373	(100.0)
	계	387	(24.8)	1,176	(75.2)	1,563	(100.0)

남자의 경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취업을 미뤘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가구소득에 따라 비경제활동인구의 학교 재학여부를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재학 비율은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대 및 4년제, 대학원 모두에서 동일한 특징을 보였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전문대 및 4년제 재학중인 비율은 저소득층 15.3%, 중소득층 25.8%, 고소득층 29.5% 등이며, 대학원 재학은 저소득층 6.1%, 중소득층 9.2%, 고소득층 15.1% 등이다.

〈표 13〉 가구소득과 비경활상태

(단위 : 명, %)

		재학중		재학아님	계
		전문대·4년제	대학원		
남자	저소득층	13 (22.8)	8 (14.0)	36 (63.2)	57 (100.0)
	중소득층	48 (38.7)	15 (12.1)	61 (49.2)	124 (100.0)
	고소득층	37 (38.9)	16 (16.8)	42 (44.2)	95 (100.0)
	계	98 (35.5)	39 (14.1)	139 (50.4)	276 (100.0)
여자	저소득층	7 (9.5)	. (.)	67 (90.5)	74 (100.0)
	중소득층	8 (8.6)	5 (5.4)	80 (86.0)	93 (100.0)
	고소득층	6 (11.8)	6 (11.8)	39 (76.5)	51 (100.0)
	계	21 (9.6)	11 (5.0)	186 (85.3)	218 (100.0)
계	저소득층	20 (15.3)	8 (6.1)	103 (78.6)	131 (100.0)
	중소득층	56 (25.8)	20 (9.2)	141 (65.0)	217 (100.0)
	고소득층	43 (29.5)	22 (15.1)	81 (55.5)	146 (100.0)
	계	119 (24.1)	50 (10.1)	325 (65.8)	494 (100.0)

다음으로 가구소득계층이 가구에 속한 자녀의 노동시장 내 소득계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분석을 위하여 가구소득계층과 가구에 속한 자녀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본인소득계층 이행행렬을 작성하였다. 가구소득계층의 구분은 OECD 기준에 따라 가구의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2004년 1차 조사당시 가구 중위소득 250만원을 이용하여, ‘250만원×2/3미만’ 인 가구는 저소득층, ‘250만원×2/3이상~250만원×4/3이하’ 중소득층, ‘250만원×4/3초과’를 고소득층으로 각각 구분하였다. 본인소득계층의 구분은 OECD 기준에 따라 소득이 파악된 2013년의 개인별 월평균소득의 중위값인 190만원을 이용하여, ‘190만원×2/3미만’ 는 저소득층, ‘190만원×2/3이상~190만원×4/3이하’ 중소득층, ‘190만원×4/3초과’를 고소득층으로 각각 구분하였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본인소득이 저소득층에 속할 확률은 낮아지고 본인소득이 고소득층에 속할 확률은 높아지는 특징을 보였다. 가구소득이 저소득층일 경우 본인소득이 저소득층에 속할 확률은 15.4%, 가구소득이 중소득층일 때 본인소득이 저소득층에 속할 확률은 14.7%, 가구소득이 고소득층일 때 본인소득이 저소득층에 속할 확률은 12.1%로 나타났다. 한편, 가구소득이 저소득층일 경우 본인소득이 고소득층에 속할 확률은 14.7%, 가구소득이 중소득층일 때 본인소득이 고소득층에 속할 확률은 17.4%, 가구소득이 고소득층일 때 본인소득이 고소득층에 속할 확률은 24.7%로 나타났다.

〈표 14〉 가구소득과 본인소득

(단위 : 명, %)

	가구소득	본인소득			계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남자	저소득층	30 (11.1)	192 (70.8)	49 (18.1)	271 (100.0)	
	중소득층	50 (12.2)	265 (64.8)	94 (23.0)	409 (100.0)	
	고소득층	21 (10.3)	117 (57.4)	66 (32.4)	204 (100.0)	
	계	101 (11.4)	574 (64.9)	209 (23.6)	884 (100.0)	
여자	저소득층	41 (21.5)	131 (68.6)	19 (9.9)	191 (100.0)	
	중소득층	57 (17.9)	229 (71.8)	33 (10.3)	319 (100.0)	
	고소득층	24 (14.2)	119 (70.4)	26 (15.4)	169 (100.0)	
	계	122 (18.0)	479 (70.5)	78 (11.5)	679 (100.0)	
계	저소득층	71 (15.4)	323 (69.9)	68 (14.7)	462 (100.0)	
	중소득층	107 (14.7)	494 (67.9)	127 (17.4)	728 (100.0)	
	고소득층	45 (12.1)	236 (63.3)	92 (24.7)	373 (100.0)	
	계	223 (14.3)	1,053 (67.4)	287 (18.4)	1,563 (100.0)	

가구소득계층이 동일하더라도 본인의 학력에 따라 가구소득이 본인의 소득계층에 미치는 영향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본인학력에 따른 가구소득계층과 본인소득계층의 관계를 살펴 보면, 우선 본인학력이 고졸일 경우 가구소득이 저소득층이면 본인소득도 저소득층에 속할 확률이 20.3%로 가장 높았고, 학력과 무관하게 가구소득이 고소득층이면 본인소득이 저소득층에 속할 확률은 대체로 낮게 나타났다. 가구소득이 고소득층이더라도 본인학력이 고졸, 전문대졸일 경우에는 본인소득이 고소득층에 속할 확률은 그리 높지 않은 반면, 본인학력이 4년제대졸일 경우에는 본인소득이 고소득층에 속할 확률이 뚜렷하게 높아지는 특징을 보였다. 이는 학력을 매개로 해서 부모소득계층이 자녀에게 세습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표 15〉 학력-가구소득과 본인소득

(단위 : 명, %)

		본인소득			계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고졸	저소득층	28 (20.3)	93 (67.4)	17 (12.3)	138 (100.0)	
	중소득층	11 (12.1)	60 (65.9)	20 (22.0)	91 (100.0)	
	고소득층	2 (13.3)	11 (73.3)	2 (13.3)	15 (100.0)	
	계	41 (16.8)	164 (67.2)	39 (16.0)	244 (100.0)	
전문대졸	저소득층	24 (11.8)	156 (76.5)	24 (11.8)	204 (100.0)	
	중소득층	25 (9.5)	193 (73.4)	45 (17.1)	263 (100.0)	
	고소득층	11 (10.9)	77 (76.2)	13 (12.9)	101 (100.0)	
	계	60 (10.6)	426 (75.0)	82 (14.4)	568 (100.0)	

<표 계속>

		본인소득						계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4년제 대졸	저소득층	19	(15.8)	74	(61.7)	27	(22.5)	120	(100.0)
	중소득층	71	(19.0)	241	(64.4)	62	(16.6)	374	(100.0)
	고소득층	32	(12.5)	148	(57.6)	77	(30.0)	257	(100.0)
	계	122	(16.2)	463	(61.7)	166	(22.1)	751	(100.0)
계	저소득층	71	(15.4)	323	(69.9)	68	(14.7)	462	(100.0)
	중소득층	107	(14.7)	494	(67.9)	127	(17.4)	728	(100.0)
	고소득층	45	(12.1)	236	(63.3)	92	(24.7)	373	(100.0)
	계	223	(14.3)	1,053	(67.4)	287	(18.4)	1,563	(100.0)

4. 계층이동과 가치관

가. 기술적 분석

계층이동의 활성화 정도 못지않게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점은 계층이동이 특정한 가치관을 가진 청년층에서 나타나는가 혹은 계층이동을 통해 특정한 가치관이 강화되는가이다. 계층이동에 성공한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 간에 의식이나 가치관의 차이가 존재하는지가 우선적으로 실증되어야 하겠지만,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의미는 상이할 수 있다. 우선 원래부터 갖고 있던 사고방식의 차이로 인해 계층이동의 성패가 좌우됐을 경우에는 계층이동은 특정한 성향을 가진 집단을 위한 선별장치 역할을 하게 된다. 반면, 계층이동 과정을 통해 특정한 의식이나 가치관이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화가 진행되었을 수도 있다. 어떠한 경우이든 공동체의 발전 관점에서 계층이동에 성공한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 간의 가치관 혹은 사고방식 차이를 밝히는 것은 중요한 과제가 된다.

우선 계층이동이 청년층의 정신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행복문항을 분석하였다. 10차 조사 설문지에서 “귀하는 현재 행복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예”로 응답한 비율을 가구소득계층-본인소득계층 교차표로 제시하였다. ‘가구소득 저소득층-본인소득 저소득층’ 집단의 경우 행복하다는 응답비율은 66.2%로 가장 낮았던 반면 ‘가구소득 고소득층-본인소득 고소득층’ 집단의 행복하다는 응답비율은 91.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가구소득 고소득층-본인소득 저소득층’ 집단의 행복하다는 응답비율은 77.8%로 계층의 하락은 행복도의 감소를 가져왔다. 부모소득 중소득층의 경우 행복도가 본인소득에 관계없이 대체로 일정하여 계층이동에 따른 영향이 비교적 적은 특징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계층이동이 청년층의 행복에 커다란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6〉 계층이동과 행복

(단위 : %)

	본인소득			계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저소득층	66.2	81.4	86.8	79.8
중소득층	84.1	82.6	85.8	83.4
고소득층	77.8	90.3	91.3	89.0
계	77.1	83.9	87.8	83.7

주 : N=1,463명.

다음으로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 참여, 주인의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투표참여, 참전의향, 봉사활동 참여 등의 문항을 분석하였다. 투표참여는 “2012년 12월 19일 18대 대통령 선거에 투표 하였습니다습니까?”는 문항에 대해 “예”로 응답한 비율을, 참전은 “만약 전쟁이 발생한다면 국가를 위해 싸우겠습니까?”는 문항에 대해 “예”로 응답한 비율을, 봉사활동은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활동·기부·후원이 있습니까?”는 문항에 대해 “예”로 응답한 비율을 각각 집계하였다.

계층이동에 따른 투표참여 실태를 보면 가구저소득층의 경우 본인소득 계층에 따른 투표참여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반면, 가구중소득층의 경우에는 본인소득이 높아질수록 투표참여가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가구고소득층의 경우에만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투표참여가 상승하였다. 계층이동에 따른 참전의향, 봉사참여 실태를 보면 공통적으로 가구소득계층과 무관하게 본인소득이 높아질수록 참전의향,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계층 상향이동을 경험한 청년층은 투표참여율은 높지 않지만 전쟁발발시 참전, 봉사활동 등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계층이동과 투표참여

(단위 : %)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계
저소득층	76.1	75.2	75.0	75.3
중소득층	79.4	74.3	70.9	74.5
고소득층	77.8	78.0	88.0	80.4
계	78.0	75.4	77.4	76.1

주 : N=1,463명.

〈표 18〉 계층이동과 참전

(단위 : %)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계
저소득층	52.1	63.7	72.1	63.1
중소득층	59.8	60.4	72.4	62.4
고소득층	55.6	62.1	72.8	64.0
계	56.5	61.8	72.5	63.0

주 : N=1,463명.

〈표 19〉 계층이동과 봉사

(단위 : %)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계
저소득층	7.0	6.5	13.2	7.6
중소득층	6.5	11.1	14.2	11.0
고소득층	8.9	9.7	15.2	11.0
계	7.2	9.4	14.3	10.0

주 : N=1,463명.

소득격차, 공공기업, 책임, 경쟁, 노력, 부의 수단 등에 관한 진술에 대해 1~10점으로 표시하도록 한 설문문항을 이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시장경제를 지지하는 것으로, 점수가 낮을수록 정부의 개입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을 의미하도록 만들었다. 소득격차는 “소득격차는 축소되어야 한다”에 가까울수록 1점,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소득격차는 확대되어야 한다”에 가까울수록 10점이고, 공공기업은 “정부가 소유한 공공기업이 많아져야 한다”에 가까울수록 1점, “공공기업은 모두 민영화해야 한다”에 가까울수록 10점이고, 책임은 “정부가 개인에 대해 보다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에 가까울수록 1점, “개인 스스로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에 가까울수록 10점이고, 경쟁은 “경쟁은 사회에 해롭다”에 가까울수록 1점, “경쟁은 사회에 이롭다”에 가까울수록 10점이고, 노력은 “성공을 위해서는 운과 인맥이 중요하다”에 가까울수록 1점, “열심히 일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에 가까울수록 10점이고, 부의 수단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만 부유해질 수 있다”에 가까울수록 1점, “경제성장을 통해 모두가 부유해질 수 있다”에 가까울수록 10점 등이다. 복합지수는 이들 점수를 모두 합산한 총점으로 만점은 60점이며, 시장과 정부에 대한 전체적인 인식 및 태도를 의미한다.

복합지수를 살펴보면, 가구의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본인의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시장경제를 지지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계층상승은 시장경제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다만, 책임에 대해서는 가구의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개인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태도를 취한 반면, 본인소득계층에 따라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아울러 부의 수단에 대해서는 가구소득계층이 높을수록 경제성장을 통해 모두가 부유해질 수 있다는데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지만, 본인소득계층은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청년층의 인식은 경쟁(6.2점), 부의 수단(6.0점), 노력(5.6점), 책임(5.2점), 공공기업(4.6점), 소득격차(4.5점) 등의 순으로 나타나 “경쟁은 사회에 이롭다”는 것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가장 높았고, “소득격차는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20〉 계층이동과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

(단위 : 점)

	가구소득	본인소득				계			
		저소득층		중소득층				고소득층	
소득격차	저소득층	4.2	(2.0)	4.3	(1.9)	4.8	(2.0)	4.4	(1.9)
	중소득층	4.5	(1.9)	4.4	(1.8)	4.9	(2.2)	4.5	(1.9)
	고소득층	4.1	(1.7)	4.6	(2.0)	5.1	(1.8)	4.7	(1.9)
	계	4.3	(1.9)	4.4	(1.9)	4.9	(2.0)	4.5	(1.9)
공공기업	저소득층	4.1	(1.7)	4.6	(1.9)	4.5	(2.0)	4.5	(1.9)
	중소득층	4.7	(1.9)	4.5	(1.9)	4.8	(1.9)	4.6	(1.9)
	고소득층	4.9	(1.7)	4.5	(1.9)	5.4	(2.0)	4.8	(1.9)
	계	4.5	(1.8)	4.5	(1.9)	4.9	(2.0)	4.6	(1.9)
책임	저소득층	5.2	(1.9)	5.2	(2.0)	5.0	(2.0)	5.1	(1.9)
	중소득층	5.3	(2.0)	5.1	(1.9)	5.3	(2.0)	5.2	(2.0)
	고소득층	5.9	(2.5)	5.2	(2.0)	5.8	(1.9)	5.5	(2.1)
	계	5.4	(2.1)	5.2	(2.0)	5.4	(2.0)	5.2	(2.0)
경쟁	저소득층	5.9	(1.8)	6.0	(1.9)	6.1	(1.9)	6.0	(1.9)
	중소득층	6.1	(1.9)	6.2	(1.8)	6.4	(1.8)	6.2	(1.8)
	고소득층	6.8	(1.7)	6.3	(1.7)	6.8	(1.7)	6.5	(1.7)
	계	6.2	(1.8)	6.1	(1.8)	6.5	(1.8)	6.2	(1.8)
노력	저소득층	5.4	(2.4)	5.4	(2.3)	5.8	(2.4)	5.5	(2.3)
	중소득층	5.6	(2.0)	5.4	(2.3)	5.7	(2.5)	5.5	(2.3)
	고소득층	6.0	(2.6)	5.8	(2.2)	6.1	(2.4)	5.9	(2.3)
	계	5.6	(2.3)	5.5	(2.3)	5.9	(2.5)	5.6	(2.3)
부의수단	저소득층	6.0	(2.0)	5.7	(1.9)	6.2	(2.1)	5.8	(2.0)
	중소득층	5.8	(2.0)	6.0	(1.8)	5.9	(2.0)	5.9	(1.9)
	고소득층	6.2	(2.2)	6.1	(1.9)	6.5	(1.8)	6.2	(1.9)
	계	6.0	(2.0)	5.9	(1.9)	6.1	(2.0)	6.0	(1.9)
경제관 복합지수	저소득층	30.7	(6.0)	31.3	(6.5)	32.5	(8.1)	31.4	(6.7)
	중소득층	32.0	(6.1)	31.5	(6.1)	33.0	(5.8)	31.8	(6.0)
	고소득층	34.0	(7.1)	32.4	(6.3)	35.7	(6.4)	33.4	(6.6)
	계	32.0	(6.3)	31.6	(6.3)	33.8	(6.7)	32.1	(6.4)

주 : 1) 표본수는 1,463명. 2) ()내는 표준편차

나. 심층분석

소득계층 및 소득계층 이동이 청년층의 경제관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경제관복합지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식을 추정하였다. 경제관복합지수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을 묻는 6개 질문을 가지고 구성하여 60점 만점으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시장경제 원리를 지지하고, 점수가 낮을수록 시장보다는 정부의 적극적 시장개입을 지지함을 의미한다.

경제관복합지수를 보면 전체평균은 32.07점으로 중간정도로 나타났으며, 소득계층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출신고교, 출신고교소재지, 성, 학력 등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계층이동을 가구소득계층과 본인소득계층을 사용하여 하향, 수평, 상향의 세 가지 종류 더미변수로 만들었는데, 하향이동은 가구소득계층 상→본인소득계층 중 또는 하, 가구소득계층 중→본인소득계층 하를, 수평이동은 가구소득계층 상→본인소득계층 상, 가구소득계층 중→본인소득계층 중, 가구소득계층 하→본인소득계층 하를, 상향이동은 가구소득계층 하→본인소득계층 중 또는 상, 가구소득계층 중→본인소득계층 상을 각각 의미한다. 요약통계에 따르면 하향이동은 전체 표본의 24.6%, 수평이동은 42.2%, 상향이동은 33.2%로 나타났다.

〈표 21〉 요약통계

변수명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경제관복합지수(60점 만점)	1,463	32.07	6.41	6	55
출신고교더미(전문계고=1, 일반계고=0)	1,463	0.481	0.500	0	1
출신고교소재지더미(지방=1, 서울=0)	1,463	0.874	0.332	0	1
성더미(여자=1, 남자=0)	1,463	0.435	0.496	0	1
고졸더미(고졸=1, 기타=0)	1,463	0.156	0.363	0	1
전문대졸더미(전문대졸=1, 기타=0)	1,463	0.359	0.359	0	1
4년제대졸더미(4년제대졸=1, 기타=0)	1,463	0.484	0.499	0	1
가구저소득더미(저소득가구=1, 기타=0)	1,463	0.294	0.456	0	1
가구중소득더미(중소득가구=1, 기타=0)	1,463	0.469	0.499	0	1
가구고소득더미(고소득가구=1, 기타=0)	1,463	0.237	0.426	0	1
본인저소득더미(저소득가구=1, 기타=0)	1,463	0.141	0.349	0	1
본인중소득더미(중소득가구=1, 기타=0)	1,463	0.674	0.469	0	1
본인고소득더미(고소득가구=1, 기타=0)	1,463	0.185	0.388	0	1
하향계층이동더미(하향=1, 기타=0)	1,463	0.246	0.431	0	1
수평계층이동더미(수평=1, 기타=0)	1,463	0.422	0.494	0	1
상향계층이동더미(상향=1, 기타=0)	1,463	0.332	0.471	0	1

경제관 복합지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통상최소자승 회귀식을 추정하였으며, 설명변수 조합에 따라 3가지 모형을 추정하였다. 전체적으로 결정계수가 작게 나타나 모형의 적합도가 낮았으며, 모형 3을 기준으로 유의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출신고교가 전문계고일 경우 일반고교에 비해 경제관 복합지수가 0.733점 낮았고, 여자가 남자에 비해 1.78점 낮았으며, 가구저소득층을 기준으로 중소득가구층은 0.892점, 고소득가구층은 2.860점 각각 높게 나타났다. 하향계층이동을 기준으로 수평계층이동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반면, 상향계층이동의 경우에는 경제관 복합지수가 1.44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타요인을 통제하고도 상향계층이동과 시장경제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것으로 계층이동이 시장경제의 강화에 순기능이 있음을 의미한다.

〈표 22〉 경제관에 관한 회귀식 추정결과

	모형 1	모형 2	모형 3
출신고교더미(전문계고=1, 일반계고=0)	-0.76** (0.352)	-0.697** (0.351)	-0.733** (0.352)
출신고교소재지더미(지방=1, 서울=0)	-0.882* (0.521)	-0.803 (0.520)	-0.836 (0.521)
성더미(여자=1, 남자=0)	-1.900*** (0.335)	-1.740*** (0.339)	-1.780*** (0.340)
전문대졸더미(전문대졸=1, 기타=0)	0.210 (0.508)	0.292 (0.508)	0.200 (0.508)
4년제대졸더미(4년제대졸=1, 기타=0)	0.204 (0.556)	0.167 (0.554)	0.237 (0.556)
가구중소득더미(중소득가구=1, 기타=0)	0.332 (0.395)	0.306 (0.394)	0.892* (0.529)
가구고소득더미(고소득가구=1, 기타=0)	1.710*** (0.478)	1.590*** (0.478)	2.860*** (0.739)
본인중소득더미(중소득가구=1, 기타=0)	-	-0.537 (0.481)	-
본인고소득더미(고소득가구=1, 기타=0)	-	1.000* (0.590)	-
수평계층이동더미(수평=1, 기타=0)	-	-	0.785 (0.519)
상향계층이동더미(상향=1, 기타=0)	-	-	1.440* (0.695)
상수	33.5*** (0.612)	33.5*** (0.740)	32.0* (0.929)
R2	0.0373	0.0442	0.0388
표본수	1,463	1,463	1,463

IV.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본 논문에서는 한국교육고용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의 소득계층이 자녀의 대학진학, 대학의 학벌, 소득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가구의 소득계층, 계층이동 등과 청년층의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인식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의 최종학력은 고학력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순서형 로짓분석결과 저소득가구에 비해 중소득가구일 경우 고학력이 될 오즈는 2.037배 높고, 저소득가구에 비해 고소득가구는 2.978배 높았다. 사교육 여부를 통제하고도 가구의 소득계층에 따라 자녀가 고학력이 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짐을 보여주는 것으로 선행연구 결과를 재확인해주는 것이다.

둘째, 가구소득계층별로 대학서열에 따른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저소득층가구의 1~10위권

대학 진학비중은 0.9%, 11~20위 1.9% 등이나, 고소득층은 7.4%, 11~20위 10.2% 등으로 저소득층가구에 비해 각각 8.6배, 5.3배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교육이 계층세습의 통로가 되는 방식이 학력보다는 학벌에 더 좌우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셋째, 고용률(=취업자수/전체인구)은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높고 고소득계층일수록 낮은 특징을 보였다. 선망직장 취업비중은 전체적으로 24.8%인데,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선망직장 취업비율도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저소득층 가구에 속하는 청년층 취업자 중 선망직장 종사비율은 19.5%, 중소득층 25.4%, 고소득층 30.0% 등으로 높아졌다.

넷째, 남자의 경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취업을 미뤘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가구소득에 따라 비경제활동인구의 학교 재학여부를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는데, 비경제활동인구 중 재학 비율은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전문대 및 4년제 재학중인 비율은 저소득층 15.3%, 중소득층 25.8%, 고소득층 29.5% 등이며, 대학원 재학은 저소득층 6.1%, 중소득층 9.2%, 고소득층 15.1% 등이다.

다섯째,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본인소득이 저소득층에 속할 확률은 낮아지고 본인소득이 고소득층에 속할 확률은 높아지는 특징을 보였다. 가구소득이 저소득층일 경우 본인소득이 저소득층에 속할 확률은 15.4%, 가구소득이 중소득층일 때 본인소득이 저소득층에 속할 확률은 14.7%, 가구소득이 고소득층일 때 본인소득이 저소득층에 속할 확률은 12.1%로 나타났다. 한편, 가구소득이 저소득층일 경우 본인소득이 고소득층에 속할 확률은 14.7%, 가구소득이 중소득층일 때 본인소득이 고소득층에 속할 확률은 17.4%, 가구소득이 고소득층일 때 본인소득이 고소득층에 속할 확률은 24.7%로 나타났다.

여섯째, 계층이동은 청년층의 행복수준에 영향을 미치며, 계층 상향이동을 경험한 청년층은 투표참여율이 높지는 않지만 전쟁발발시 참전, 봉사활동 등에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부모의 소득계층보다 자신의 소득계층이 개선된 상향계층이동의 경우에 시장경제 지지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가구의 소득계층이 자녀의 학력, 학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계층이동이 청년층의 가치관과 높은 관련성을 갖는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고소득계층일수록 자녀가 고학력, 고학벌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은 이를 매개로 한 계층세습의 개연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울러 계층상향이동을 경험한 청년층일수록 공동체에 대한 책임, 시장경제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는 계층이동이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정의 감에 부합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건강성을 유지, 강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가구소득이 소수의 명문대학 진학과 상관관계가 높다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볼 때, 공교육을 강화해서 사교육의 필요성을 크게 낮추고 입시제도를 개선해서 가구소득의 영향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교육성과가 높고 학부모들로부터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특목고, 자사

고 등을 기숙형으로 확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학비를 획기적으로 감면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저소득가구의 자녀는 가구의 경제적 궁핍으로 인해 조기에 취업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스펙쌓기 등 치열한 취업경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취업준비의 부족은 취업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스펙중심의 채용관행을 역량중심으로 개선하는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기업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특히,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을 조기에 정착시켜 인력의 양성에서부터 채용, 배치, 승진 등 기업의 인사관리 전반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본 논문의 분석결과가 과거에 비해 어떤 수준인지, 외국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분석하지 못한 점은 한계로 남아 있으며 후속연구를 기대한다.

❖ 참고 문헌 ❖

- 김경근(2005). 한국사회의 교육격차. 『사회양극화 경향과 교육격차 해소방안』 2005 전국 교육연구소 네트워크 세미나 자료집.
- 김영화 · 김병관(1999). 한국 산업화 과정에서의 교육과 사회계층 이동. 『교육학 연구』 제37권제1호. 155-172쪽.
- 김홍균 · 문혜경(2007). 대학수능시험 성적이 임금에 미치는 효과분석. 『공공경제』. 제12권제1호. 161-178.
- 김희삼(2009). 지방대학 문제의 분석과 시사점. 『KDI정책포럼공공경제』. 제21호
- 방하남 · 김기현(2003) 한국사회의 교육계층화-연령코호트간 변화와 학력단계별 차이. 『한국사회학』. 제37권제4호. 31-65쪽.
- _____ (2001). 변화와 세습: 한국사회의 세대간 지위세습 및 성취구조, 『한국사회학』, 제35권 제3호, 1-30쪽.
- 오호영(2007). 대학서열과 노동시장 성과 - 지방대생 임금차별을 중심으로. 『노동경제논집』. 제30권 제2호. 87-118쪽.
- 유기홍 의원실(2013). “2011~2013학년도 서울지역 고교의 서울대 합격자 현황 분석 결과”. 보도 자료. 11월 19일자.
- 이혜영 · 한준 · 김미란(2006). 『학교교육이 사회계층이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 이혜영 · 박인중 · 성기선 · 한만길(1998). 『한국 근대 학교교육 100년사 연구(III)-해방이후의 학교교육』. 한국교육개발원
- 장상수(2007). 가족배경과 고등학교 계열 선택. 한국사회학, 42(2), 118-146.
- _____ (2000). 교육 기회의 불평등: 가족 배경이 학력 성취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34(4), 671-708.
- 장수명(2006). 대학서열의 경제적 수익 분석. 『한국교육』. 제33권제2호. 75-107쪽.
- 중앙일보 대학평가 사이트 <http://univ.joongang.co.kr/>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고용패널 원자료
- 한준 · 한신갑(2006). 대졸자의 사회경제적 성과를 통해 본 대학 간 불평등.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발표문
- Bowles & Gintis(1975). The Problem with Human Capital Theory-A Marxian Critiqu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65. No.2. May. pp.74-82.

❖ Abstract ❖

Youth Social Mobility and Attitude toward Market Economy

Oh Ho-Young(KRIVET), Lee Jung-Soo(Korea University)

This article examines the factors that affect children's educational performance measured by schooling year and elite university graduation, especially focused on the difference by family incom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mobility and attitude toward market economy using the Korea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KEEP).

The results are as follows.

Family income strongly affected the children's schooling year and elite university graduation possibility. This means that education acts as a passage for the rich to pass on power to one's descendants. In this sense, it is very important to reform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system so that student ability have crucial importance regardless of private tutoring or family background.

Also, the youth who experienced upper social mobility compared to their parent have positive attitude toward market economy. This means that enhancing social mobility is not only accord with one's natural justice on the individual level but also strengthening solidarity of society through more people turned into responsible citizen.

Key words: KEEP, social mobility, schooling year, elite university